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 이광오

이슈진단

건설 고용시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국민편의성 제한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SOC 예산 삭감

연구원소식

“한국-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결과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발간물안내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발간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 이 광 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0대 집행부가 마무리되어 가는 2017년 가을이자,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결실은 다지고, 다듬고, 모으는 것이라 한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 전문건설산업도 건설현장에서 많은 땀과 눈물을 감내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최적의 여건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시공하는 우리 전문건설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느냐에 달려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여타 산업보다 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전문건설산업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 그 자체의 종속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자재 및 장비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수많은 서민경제에 종사하는 업계에도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현황판을 설치했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어느 정부에서건 일자리 고용창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하지만, 타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용성이 좋은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모호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

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SOC 질적 수준도 OECD국가 중 중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우리에게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임에도 국가 건설정책은 축소만 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공사 계약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적정 공사비” 적용이 아닌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배불리기 위해 잇속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족한 정부의 예산에 짜 맞춰 설계된 시설물이 과연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근본적인 대안 없이, 모든 책임은 자연히 건설업체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고, 모든 잘못은 건설업체에 있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현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이 새 정부의 일자리 기본 방향이다. 도래하는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라고 여기저기서 메아리 치며, 거창한 미래 산업에 대한 꿈을 꾸지만, 4차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공사비'가 아닌 '공사비 현실화'이며, 업계의 주장과 업체의 쇄신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청년층이 새로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구조로 건설정책 방향을 재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원도급 업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와 더불어, 정부에서부터 '제값주기'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헐값에 대충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일자리를 피하는 건설산업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건설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박한 공사비로 저가공사를 강요하며, 근본적인 대안 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 미봉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고, 청년이 싫어하는 일자리로 방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말하는 갑질 행위가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의 잣대를 건설수주 감소에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미시적인 사안에 급급해 하지 말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전문건설산업이 무엇으로 주도권을 잡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국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고용시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김 태 준 책임연구원(tjkim@ricon.re.kr)

인구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이다.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인구가 70%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OECD에서 3번째로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7월 한국은행은 2026~35년 기간 중에 경제성장률이 0.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 고용시장은 고령화에 대한 타격이 특히 큰 분야이다. 건설업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이며,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은 6.4%로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건설업 30세 미만 비중 10.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 인력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인력 확대를 통한 양적 보충, 그리고 기술 진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보완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건설업 취업 매력도는 떨어지며, R&D의 투자비중이 낮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산업구조로 인해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각도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질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중심 신기술이나 소재 등의 제품 중심 R&D뿐만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공정·공법 R&D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확대·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업체 R&D를 장려·지원하는 제도구비가 필요하다.

양적인 대응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건설업

고용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청년의 신규유입보다 타업종의 장년층 유입이 많아 숙련공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이 어려운 인력으로 기술계 기술자격자(43.1%), 비자격 숙련공(25.3%), 기능계 기술자격자(24.5%), 일용근로자(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건설근로자를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이미지 및 처우 개선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비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쿼터 58,000명 중 2,500명+a가 건설업에 할당되어 있어 서비스업(100명+a) 다음으로 가장 적다. 여기에 단순기능직은 체류기간이 5년 미만으로 숙련도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는 영국이나 일본의 외국인 취업허가제가 숙련공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비자를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하여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업의 고용시장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편의성 제한으로 이어지는 지나친 SOC 예산 삭감

최 별 하 연구원(cbh729@ricon.re.kr)

정부는 7월 29일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올해(400.5조 원) 보다 7.1%, 약 28.4조원이 증가한 429.0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SOC예산은 2017년 22.1조원에서 4.4.조원(20%)이 삭감된 17.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삭감된 4.4.조원은 조달청이 1년간 집행하는 신규 공사 입찰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예산은 2017년 22.1조원, 2018년 17.7조원, 2019년 17.0조원, 2020년 16.5조원, 2021년 16.2조원으로 앞으로 연평균 7.5%씩 감소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OC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가능케 하고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필수적 요소이며, 충분한 SOC투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SOC는 국민의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SOC확충은 국가의 중요 임무이다. 따라서 정부의 SOC예산 삭감이 국민편의성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복지와 SOC를 분리하여 별도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충분한 SOC는 오히려 복지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새 정부는 복지, 일자리창출, 지역 격차 해소와 같은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SOC확충은 복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우리 연구원의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전문건설업 1.121%, 종합건설업 0.028%의 고용증가가 도출된다. 8월 청년실업이 9.4%로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점에서 건설업종 고용창출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SOC예산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낙후지역이 현존하고 있고,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철도, 도로, 항공에서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에 도시재생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64%, 도로58%의 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계획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SOC 투자 적정관리를 통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루려는 데는,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대규모 SOC 스톡도 있지만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인한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고질적인 문제인 입찰담합 등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 필요하다.

업계의 반성을 통한 혁신과 부정적 이미지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면, SOC예산축소 재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9월 7일(목) 오전 10시, 삼성호텔 아도니스 홀에서 “한국-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베트남 대사와 도 타잉 똥(Đỗ Thanh Tùng) 베트남 국립건축원장 등 베트남측 인사 20여명과 권용복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손명선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을 포함한 정부, 업계 및 학계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금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투자대상국가로서,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 정부 주도의 개발프로젝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계의 관심과 진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최된 본 국제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측 인사들과의 교류와 더불어 베트남 건설 시장의 상황과 진출가능성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된 듯하다.

세미나는 서명교 원장과 베트남 국립건축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환영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및 주한베트남 대사의 축사에 이어, 베트남과 한국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측이 한국 건설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소개받기를 요청함에 따라 고층빌딩, 친환경 자동화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주제인 초고층 건설 분야에서는 초고층 빌딩 적용 기술 및 롯데월드타워 사례(롯데건설: 도광수 수석·서유상 수석), 도심지 고층빌딩 건설프로젝트 CM사례(범CM: 김성영 상무·김효성 부사장), 2주제인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설 디자인 사례(삼우: 김동훈 팀장·김창영 부소장), 3주제인 스마트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장비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영신디엔씨: 최평호 이사·김도근 차장) 등의 발표와 베트남 측의 그린빌딩 등 건설투자 정책 발표가 있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베트남과의 건설협력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건설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베트남 건설정보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건설업체의 베트남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리 연구원은 9월 27일(수), 전문건설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설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모집한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본 공모전은 공정거래, 계약제도, 건설금융, 건설기술 등 전문건설업 현안해결 및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전문건설업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자를 구분해 진행되었다.

공모전은 지난 8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제안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팀), 가작 1명에게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되었다.(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가작 50만원)

시상식에서 서명고 원장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공모해주신 제안은 앞으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 상 자

▶ 우수상: 2명

한흥구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의 건설공사 보험 인수/보험금 지급시 관련 법령 심사 의무화

문경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안정적 하도급대금 확보

▶ 장려상: 2명(팀)

주영덕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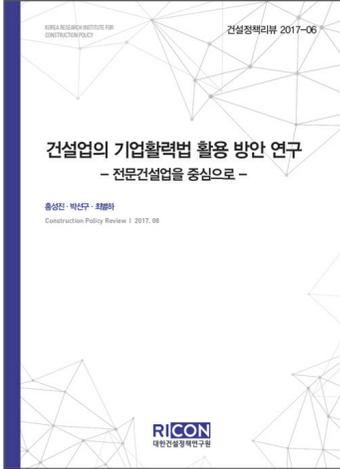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구조물해체공사 무등록 시공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 가작: 1명

이성오 현식토건(주)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열람제도 방안 마련



“건설업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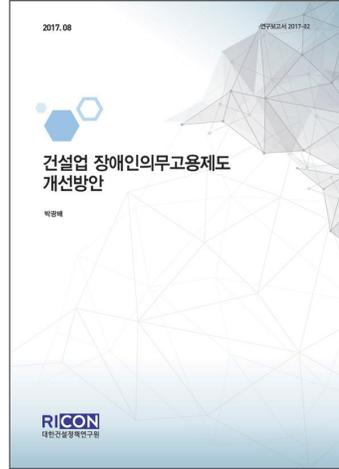


우리 연구원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건설정책리뷰를 발간하였다.

-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 현재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누적, 총 46개사)

동 보고서는 기업활력법의 개관을 시작으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 마련 및 건설업의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과 전문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사례에 대한 추정도 서술하였다.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우리 연구원은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현재의 장애인 건설근로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의무고용률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
-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도 높은 수준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
- 실적액 기준이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건설업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개선 필요

본 보고서 내용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활용되어 장애인 취업보호라는 목적과 건설업자의 경영활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